

공 개



의안번호	제 369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11. 4. (제 19 차)

의  
결  
사  
항

(대구)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11. 4.

## 1. 의결주문

(대구)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대구)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상호저축은행법」상 과징금 대상인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와 관련하여 (대구)유니온저축은행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20차 제재심의위원회(2020.9.17.) 심의필

<별지>

(대구)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228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법적 근거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38조의2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30조의2

## 2. 조치사유(지적사항)

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대구)유니온저축은행은

2018.7.26. (주)○○○○○<sup>1)</sup>에 일반자금대출 50억원을 취급한 이후  
2018.9.19. 동사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주)○○○○○<sup>1)</sup>에 일반자금

대출 60억원을 추가로 취급함으로써 동일차주<sup>2)</sup> 신용공여 한도를 25.6억원<sup>3)</sup>(2018.6월말 기준 자기자본 337억 73백만원의 7.57%) 초과<sup>4)</sup>하였음

- 1) 동일한 날짜(2018.3.10.)에 설립되었고, 본점 주소지 및 등기임원이 동일
  - (주)○○○○○ : 2018.3.10. 설립, 대주주 ○○○, 등기임원 ○○○·○○○
  - (주)○○○○○ : 2018.3.10. 설립, 대주주 ○○○, 등기임원 ○○○·○○○
- 2) 동일인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 정한 기업집단에 해당
  - 임원겸임 : 등기이사가 ○○○·○○○으로 동일
  -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개최한 이사회에서 양 사 모두 ○○○·○○○이 등기임원으로서 의결
- 3)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84억 43백만원(자기자본의 25%)을 25.6억원 초과
- 4) 2018.12.26. ○○○○ 대출이 상환됨에 따라 한도초과 해소

## 관 계 법 규

### □ 상호저축은행법

####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 ② (생략)

②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 ⑧ (생략)

제2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생략)

#### [별표 1]

####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게 대한 처분 사유(제24조제1항 관련)

19. 제12조를 위반하여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

가. 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나. ~ 다. (생략)

2. ~ 3. (생략)

**제39조(벌칙)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각각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자(제1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8 ~ 11. (생략)

⑥ ~ ⑦ (생략)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 ③ (생략)**

④ 법 제12조제3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⑤ (생략)

⑥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는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빼고 산정한다.

1.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개별차주 명의의 예금등(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거나 양도가 자유로운 것과 제3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2.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 금액

3. 정부, 한국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등 채권 회수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위반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나.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통지서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발행번호

2. 과징금 납부자

3. 위반일

4. 위반행위의 종류

5. 과징금 납부금액

6. 납부기한

7. 수납기관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등)**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과 시행령 제30조의3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별표9>와 같다.

## 상호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기준

### 1. 목 적

이 기준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30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통 칙

가. “자기자본”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나. “과징금 부과기준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이라 한다)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날로 한다.

다. 과징금을 부과 받을 자(이하 “과징금부과대상자”라 한다)의 “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는 기준일의 최직근 결산일의 재무상태로 한다.

라. 과징금부과대상자의 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에 대한 판단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부과대상자의 별도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명 내역을 적용할 수 있다.

(1) 과징금부과대상자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2) ~ (3) (생략)

마. 과징금부과대상자의 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소명에 대한 책임은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있고, 해당 자료 제출이나 소명이 없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징금 감경 및 면제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감독기관의 인지'라 함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의 종합검사, 부문검사, 현장검사, 서면검사, 상시 감시, 및 제보, 언론 보도 등으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이 과징금부과대상자의 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



등을 파악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단, 검사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인지시점은 검사명령의 사전통지를 한날로 간주하고 긴급한 소요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검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로 간주한다.

사. “위반행위의 시점”은 법제38조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의 경우 한도초과여신의 상환을 의미하고 법 제38조의2 제1호 나목 및 제3호의 경우 위반여신의 상환을 의미한다.

아. “부당이득”은 법 제38조의2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3.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법정부과한도액에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과징금부과대상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부과 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요소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법 제38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위반금액(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액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 위반금액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이전의 위반금액에 추가 확인된 위반금액을 합산하여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은 최종 산정된 과징금에서 차감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법 제38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각기 정한 부과

비율(이하 “법정 최고 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5. 기본과징금의 산정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영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적용을 받는 위반행위의 경우,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적용한다.

구 분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1단계	2억원 이하	× 7/10
2단계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20
3단계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7/40
4단계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 7/80
5단계	2천억원 초과	× 7/160

### <기본과징금 산정방식>

법정부과한도액	기본과징금
2억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1단계 기본부과율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법정부과한도액-2억원)×2단계 기본부과율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18억원×2단계 기본부과율+(법정부과한도액-20억원)×3단계 기본부과율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18억원×2단계 기본부과율+180억원×3단계 기본부과율+(법정부과한도액-200억원)×4단계 기본부과율
2천억원 초과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18억원×2단계 기본부과율+180억원×3단계 기본부과율+1,800억원×4단계 기본부과율+(법정부과한도액-2천억원)×5단계 기본부과율

## 6. 기본과징금의 조정

### 가. 일반원칙

-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 후 과징금은 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가중하되, 그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text{가중금액} = \text{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 \times (\text{위반일수}-1) \times 0.1\%^{*} \text{ 또는 } 0.2\%^{**}$$

\* 364일 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 364일을 초과하는 위반의 경우로서 364일 초과일수에 적용

(2)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 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법 제38조의2 제1호 가목, 제2호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시정범위	시정시점	감정기준
전부시정 (한도초과 전액 상환)	감독기관 인지전	기본과징금의 50% 감정
	감독기관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30% 감정
일부시정 (한도초과액의 50% 이상 상환)	감독기관 인지전	기본과징금의 30% 감정
	감독기관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15% 감정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정할 수 있다.
- (4)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정할 수 있다.
- (5) 법 제38조의2 제1호 나목에 따라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과징금이 병과 될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할 수 있다.
- 대주주 등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전부 시정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75%를 감정할 수 있다
  - 대주주 등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이의 50%이상을 시정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50%를 감정할 수 있다
- (6) 법 제38조의2 제3호 위반에 따른 기본과징금의 경우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부 시정한 경우 100분의 25 이내에서 감정할 수 있다.
- (7)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정할 수 있다.

## 7.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범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정 사유 조정 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단, 법제38조의2 제3호의 과징금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1)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유예조치포함) 또는 경영개선요구(유예조치포함) 조치를 받은

경우, 단 기준일 현재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액하지 아니 한다.

- (2)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하여 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증자 등 자구노력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과징금부과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법제38조의2 제3호의 과징금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1)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또는 경영개선명령유예의 조치를 받은 경우, 단 기준일 현재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지 아니 한다.
- (2)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현저히 하락하여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증자 등 자구노력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과징금부과대상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38조의2 제3호 과징금의 경우 대주주 등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 (1) 기준일 현재 대주주 등의 채무상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어 대주주 등이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라. 기 타

-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벌금·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란 판결의 확정 및 과징금 및 과태료의 납부완료로 의미한다.

(3) 단순오류, 경미한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로서 상호저축은행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조정 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할 수 있다.

## 8.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에 관한 사항

가. ~ 다. (생략)

## □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

###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③ (생략)

④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집행간부 포함)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당해임원의 임면권자(임면제청권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

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1조(기타 조치)** 감독원장은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업무방법개선의 요구

금융기관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하여 그 처리기준, 절차·운영 등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 2. 삭 제

### 3. 삭 제

#### 4. 관련기관앞 통보

금융관련법규 이외의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검사결과 관련자가 진술일 현재 퇴직한 경우로서 관련기관 등의 업무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실 등을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제64조(제재내용의 기록·유지)** ① 금융기관은 임직원이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제재 또는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및 제재·징계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고 이를 인사에 엄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위법·부당사실 등을 감독원장으로 부터 통보받거나 퇴직한 직원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위법·부당사실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3]

V. 비은행부문

V-1.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

2.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가. 제재대상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이하 “개별차주등”이라 함)한도 초과취급

나. 제재기준

제재의 종류	차주별 한도초과취급액 비율(자기자본대비)	한도초과취급 합계액 비율(자기자본대비)
해임권고/면직	30% 초과	50% 초과
직무정지/정직	20% 초과 30% 까지	30% 초과 50% 까지
문책경고/감봉	10% 초과 20% 까지	20% 초과 30% 까지
주의적경고/견책	5% 초과 10% 까지	10% 초과 20% 까지

- 주 1) 개별차주 등 한도 초과취급 합계액비율 10%까지, 차주별 한도 초과취급액비율 5%까지는 주의 조치 한다.
- 2)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임. 다만, 결산결과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의 금액(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본문)

##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구)유니온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11.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228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 경고 2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원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대구)유니온저축은행은

2018.7.26. (주)○○○○○○에 일반자금대출 50억원을 취급한 이후  
2018.9.19. 동사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주)□□□□에 일반자금  
대출 60억원을 추가로 취급함으로써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5.6억원(2018.6월말 기준 자기자본 337억 73백만원의 7.57%)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나. 여신 사후관리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대구)유니온저축은행은

2018.3.14. ㉠㉠(주)에게 기존 차주인 (주)◇◇◇◇◇◇◇◇◇◇의 채무와 담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일반자금대출 40억원을 취급하면서, ㉠㉠(주)가 대출취급일 직전(2018.3.1.)에 설립(자본금 50백만원)된 신생기업으로써 재무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등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법인인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인수를 승인하였음

또한, 담보주식이 거래 정지됨에 따라 ㉠㉠(주)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상황에서 2018.4.30. ㉠㉠(주)가 기존 차주인 (주)◇◇◇◇◇◇◇◇◇◇에게 담보주식을 다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계약서상 매각대금 39.9억원을 2018.4.3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하였음에도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물상보증인만 변경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저축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93	02-3145-7391